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차단 정보 안내 서비스 시범운영 침수 지하차도 통제정보, 내비게이션 사전안내 서비스 도입

국토교통부, 2026. 4. 29.(수)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안내한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 (지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지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 이후, 전국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확대해 왔지만, 운전자가 지하차도에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는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제 정보와 함께 우회경로를 미리 안내받아, 긴급한 회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가 함께 협력한다.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지방정부는 현장 통제를 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통제 정보를 전송하고, 이 정보가 경찰청을 거쳐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반영되는 방식이다.

지하차도 차단 정보 안내 서비스 운영 체계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의 지하차도 8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계 대상 지하차도(서울·대전 총 83개소, 차단기 157개)

연번	지하차도명	지역	차단기	연번	지하차도명	지역	차단기
합계	총 83개소		157	42	개봉	구로구	2
서울시	총 73개소		131	43	개화	강서구	2
1	기락	송파구	2	44	고척2	구로구	2
2	문정	송파구	2	45	공항입구	강서구	2
3	석촌	송파구	2	46	구로역	구로구	2
4	송파	송파구	2	47	구로	구로구	2
5	신원	서초구	2	48	국회앞	영등포구	2
6	위례중앙	송파구	2	49	노들길	영등포구	2
7	모래내	마포구	2	50	등촌	양천구	2
8	서빙고	용산구	2	51	서부트러터미널앞	양천구	2
9	성산	마포구	1	52	신도림	구로구	2
10	월드컵	마포구	2	53	여의2	영등포구	2
11	익주로	중구	1	54	오금	양천구	2
12	충산	서대문구	2	55	구룡	강남구	2
13	퇴계로	중구	2	56	기양	강서구	1
14	매현	서초구	2	57	가포	강남구	2
15	대방	영등포구	2	58	광나루	광진구	1
16	동작	동작구	1	59	구반포	서초구	1
17	사평	서초구	2	60	금하	금천구	3
18	선암	서초구	1	61	도봉	도봉구	2
19	양재	서초구	2	62	노들	노원구	1
20	여의교	동작구	2	63	반포	서초구	1
21	염곡	서초구	2	64	상도	노원구	2
22	영등포	영등포구	2	65	성수대교북단	성동구	1
23	하계	노원구	2	66	수력	노원구	1
24	노천	도봉구	2	67	수서	강남구	2
25	담터	노원구	2	68	염곡동서	서초구	2
26	방학	도봉구	2	69	일원	강남구	2
27	월계2	노원구	1	70	잠두봉	마포구	1
28	월계3	노원구	1	71	장암	노원구	1
29	월계	노원구	2	72	화곡	강서구	1
30	정동	도봉구	2	73	암사초록길	강동구	2
31	군자교동측	광진구	2	대전시	총 10개소		26
32	답십리굴다리	동대문구	2	1	삼천	서구	2
33	동일로	중랑구	2	2	갑천	서구	2
34	마장	성동구	2	3	문예	서구	2
35	서울숲1	성동구	2	4	대동	동구	2
36	신내	중랑구	2	5	계룡로	서구	4
37	신답	성동구	2	6	도마	서구	1
38	중랑	동대문구	2	7	오랑	서구	2
39	오목	양천구	2	8	충촌	중구	2
40	외발산	강서구	2	9	홍도	동구	5
41	가마산	구로구	2	10	엑스포	서구	4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 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율운행선박 시대, “데이터로 연다” 해수부·산업부, 자율운행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

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 2026. 5. 7.(목)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5월 7일(목) 14시에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자율운행선박 AI 데이터플랫폼 사업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자율운행선박은 AI 모델이 센서, 항해장비, 기관설비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운항 판단을 하는 선박으로, 이번 AI 데이터플랫폼 사업은 충돌회피, 항로 최적화, 고장 예측 등 핵심 기능에 필수적인 실제 해상에서 축적되는 실운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표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운행선박 AI데이터플랫폼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26~'29 (4개년)
총사업비	346.06억원(국비 300억원, 민자 46.06억원)
수행주체	산업부(한국산업기술기획기원)
사업 주요내용	▲ 학습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AI 모델 개발 및 활용

해수부와 산업부는 '25.12월부터 'M.AX 얼라이언스*' 자율운행선박 분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번 사업에 대한 조선·해운·IT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왔다. 그 결과, 오늘 행사에는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 기업, AI 기업, 연구기관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사업수행기관과 참여의향서 체결을 통해 기존 데이터 공유, 데이터 수집용 선박 지정 협력, 데이터 수집 장비 제공 등 협력 의지가 확인되었다.

* Manufacturing AX 얼라이언스 : 제조·AI 기업 및 학계·연구기관 등 제조 AX 확산을 위한 민·관·학·연 역량을 총결집해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출범('25.9)한 협의체, 자율운행선박 등 11개 분과

사업수행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이하 “KRISO”라 한다.)는 자율운행시스템, 항해·조종, 엔진·기관, 원격관제·디지털트윈, 통신·데이터, 해상교통, 기상, 안전·보안 등 8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100여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금일 행사에서 KRISO는 데이터별 표준 포맷을 공유하고, 실운항 데이터 수집 계획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실제운항 기반 데이터를 수집하여 대형조선사들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사들까지 자율운항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고품질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올해 개시될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시완전자율운항 기술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실증 확대, 사업화, 국제표준 반영까지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수부·산업부 공동으로 기술개발, 실증·산업 확대,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제표준 주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도 발표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K-조선이 앞으로 만들어낼 자율운항선박의 경쟁력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에서 결정된다”며,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결합해 세계 최고수준의 데이터 은행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이어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 활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해운·조선산업이 마주한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라는 변화의 중심에는 자율운항선박이 있다”며, “해운·조선 협력의 연장선인 금번 사업을 통해 축적하게 되는 운항데이터는 국제표준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수부도 기술개발과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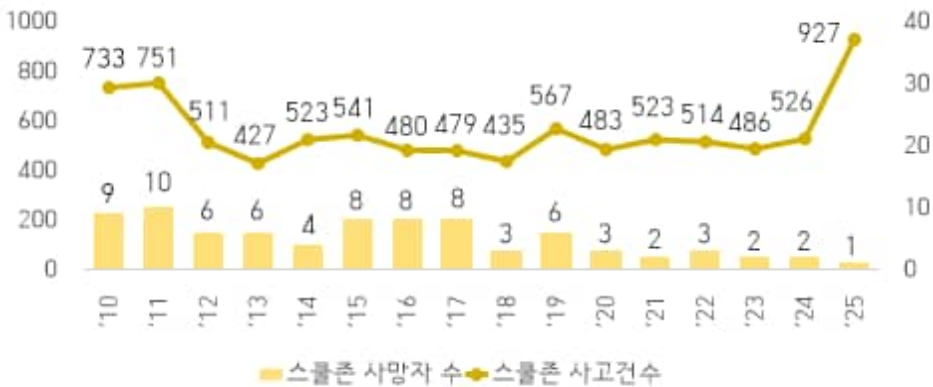
관계기관 합동,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2026. 5. 25.(월)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5년 스쿨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다양한 안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수 및 사고 건수(단위 : 명/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보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54%)가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사고 원인별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는다. 이를 위해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 원을 투입해 보도(44개교)와 교통안전시설(104개소)을 확충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하고, 신호등이 있더라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2.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 단속 강화

운전자가 잘 모르거나 헛갈리기 쉬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집중 홍보한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집중신고제도 운영한다.

3.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24년168건 → '25년496건)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을 일상화하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걷기,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출플러스지원단, 「방산-ITS 분야 수출·수주 협력 간담회」 개최 K-방산과 K-ITS의 전략적 만남,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

재정경제부, 2026. 5. 27.(수)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5월 27일 수출입은행에서 「방산-ITS 분야 수출·수주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기술의 방위산업 접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무기체계 지능화와 유무인 복합화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의 첨단기술을 방산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양 산업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을 구상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TS 기술은 AI 기반의 객체 인식통신(V2X), 통합 관제, 지능형 이동체와 디지털 트윈 등 민간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용 이동체 연계, 복합경계-통합지휘, 국방 자율주행, 안티드론 등 국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원단은 이러한 기술적 흐름에 맞춰 이번 간담회를 통해 ITS 기술 강소기업과 방산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방산의 하드웨어와 ITS의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너지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원단 부단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협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K-ITS 기업 6개사와 K-방산 기업 8개사가 참여하여 각 기업의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p>방산 분야 8개사주요협력분야</p>	<p>한화에어로스페이스(위지정보 기술), 기아차(자율주행), 한화시스템(드론 대응, 경계·지휘통제), (주)우리별(안티드론), 블루웨이브텔(탐지/식별), (주)에이아이리더(경계 솔루션), 트래시스(통합 관제), 포인드(시 기반 탐지/식별)</p>
<p>ITS 분야 6개사주요협력분야</p>	<p>(주)딥엑스(온디바이스 무기체계), 뱀부스(디지털 트윈), (주)에스오에스랩(자율주행 센서), (주)에티포스(무인차량 운용), (주)지스(전장 지휘통제 보안), 쿠도커뮤니케이션(복합경계 대응)</p>

기술 발표 후 이어진 토의 세션에서 참석 기업과 유관기관들은 방산과 ITS 간의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과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K-ITS의 첨단 기술력과 K-방산의 신뢰성이 결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패키지 수출모델이 될 것”이라며 “두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단 교통서비스 연구용역 착수, DRT·자율주행 연계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새만금,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첫 출발, 첨단 교통서비스 본격 검토

재정경제부, 2026. 5. 27.(수)

새만금개발청은 5월 20일 새만금청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운영 방안 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새만금지역의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접근성을 개선하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기업 입주 확대, 새만금 개발계획에 발맞춘 도시·산업·관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첨단 교통서비스 및 인프라 도입 여건 분석과 도입 방안 마련 △첨단 교통서비스 도입 우선순위 및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및 운영 방안 검토 등이다.

*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

특히, 수요응답형 교통(DRT) 실증운영은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수요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실증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새만금형 첨단 교통서비스의 실효성 검증에 사용하며 향후,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의 교통수요 특성을 반영해 DRT 운영 권역 확대,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등 첨단 인프라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특성에 부합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반영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기존 대중교통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첨단 교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만금만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불편 줄이고 관광·공공서비스 더 가까이 지역 맞춤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 2026. 5. 26.(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UAM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UAM 초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서비스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중점 발굴하고, 기체·운항·통신·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한다.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며, 1개 사업을 선정해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모델의 공공성, 지역 수요 적합성, 기존 교통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민간 참여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특히 교통취약지역 지원 등 공공기여도가 높거나 민간기업 참여 기반이 우수한 사업모델은 우대할 계획이다.

「2026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공모 개요

구분	내용
공모기간	'26. 5. 29(금) ~ '26. 7. 28(화) * (신청주체) 광역지방정부의 장
선정사업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초기 상용화 준비를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1건 선정하여 최대 10억원 지원(지방비 1:1 매칭)
지원내용	① 사업계획 : 지역 수요 분석을 통해 교통·관광·공공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 도출 및 버티포트 기본구상, 최적노선 분석, 전파환경평가 등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원 ② 건축기획 : 버티포트 입지 및 규모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등 건축기획 지원 ③ 건축설계 : 버티포트 조성에 필요한 계획, 중간, 실시설계 지원
평가절차	전문분야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①서면평가 후 3배수 선정하고, ②현장실사, ③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사업 선정

공모 주요 일정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AI 기반 구조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살려주세요” 바다 위 조난 음성, 시가 듣는다

해양경찰청, 2026. 5. 26.(화)

앞으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와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묻힌 긴급 구조 요청을 인공지능(AI)이 찾아내어 기존 인력 중심 체계를 넘어 '인명 구조 적기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AI 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연구개발(R&D)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에 나섰다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잡음과 신호 미약 등 해양 통신 특성에 맞춘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기존 인력 중심의 해상 긴급신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자 추진된다.

바다에서 긴급신고는 육상과 달리 일반 전화뿐 아니라 무선 조난교신(VHF, MF/HF)과 V-Pass 등 디지털조난신호(DSC)까지 동시에 접수된다. 특히, 파도와 엔진 소음 등으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첨단 기술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상황요원이 수많은 무선 교신을 직접 청취하며 긴급 상황을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살려달라”, “침수 중”, “기관 고장” 등 음성 조난을 우선 식별하여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에 새롭게 개발되는 해양 특화 인공지능 시스템은 ▲여러 무선 채널의 음성을 분석하여 조난신호 자동식별 ▲ 조난 음성 신호 실시간 문자 변환 표출(STT*)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STT(Speech To Text) : 음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또한, 디지털 조난신호(DSC)의 발생 위치와 과거 신호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오발신 가능성을 판별함으로써, 오인 출동으로 인한 인력 소모를 줄이고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해양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한 뒤 2029년 전국 해경 상황실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개발(R&D)은 점차 복잡해지는 해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미래형 상황실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촘촘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